

9급모의평가 한국사

채한태박사 & 문병일 교수
명품사회(www.examsahoe.com)
아모르이그잼고시학원

[정답 해설]

01	②	02	①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④	08	④	09	②	10	④
11	④	12	②	13	②	14	①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②	20	①

1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가)는 교양, 보다 발전된, 예술적인 것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고, (나)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다.

② 기계를 발전된 물질 문화로 본다면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는 좁은 의미의 문화를 가리킨다.

③ 모든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 얻어진다(학습성).

④ 좁은 의미의 문화는 수준 높고 세련되고 편리한 인간의 진보된 상태를 의미하며, 문화를 우열 평가가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넓은 의미의 문화에는 평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2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이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으로 기본원리가 수정되었다. 따라서 ①번의 경우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므로 새로운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권, (다)는 소극적이고 포괄적 권리에 해당하는 자유권이다.

① 청구권은 기본권의 침해 시에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으로 (다)에 해당한다.

③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복지국가에서 새로이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으로 (나)에 해당한다.

④ (나) 사회권은 적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에 해당하며, (다)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을 띠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4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그림은 David Easton의 정책 결정 모형(투입-산출 모형)에 해당한다. '투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나타내고, '산출'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의미한다.

④ 권위적인 정부일수록 '투입'에 해당하는 시민의 요구와 지지, 반대 의견의 제시, 공청회 활동 등이 억압되고 표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부일수록 국민의 요구(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오답 피하기]

① 선거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투입'에 해당한다.

②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투입)할 수 있다.

③ 오늘날에는 (나) 정책 결정 기구 중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당성은 강하지만,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약하다. 반면에, 행정부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료들로 구성되어 오늘날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며 행정부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행정국가화 현상)

5번 정답 ③번

정답 해설 : (가) 세대 네 이동(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지위의 변화), (나) 세대 간 이동(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일어나는 지위의 변화), (다) 구조적 이동(전쟁, 혁명, 산업화 등에 의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지위의 변화)이다.

정답 해설 : ③ 폐쇄적 계층구조는 계층 간 수직 이동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계층 구조이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부모와 자녀의 계층 비교를 통해 (가) 세대 간 이동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계층을 세습한 사람이 (나)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였다면, 부모의 지위를 세습한 사람이 그 후 계층의 상승(또는 하강)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가)세대 간 이동에도 해당한다.

④ 신분 제도의 폐지는 (가), (나), (다) 모두를 야기할 수 있다.

6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A는 정당, B는 시민단체, C는 이익집단에 해당한다.

②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 이익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과 특수영역에만 관심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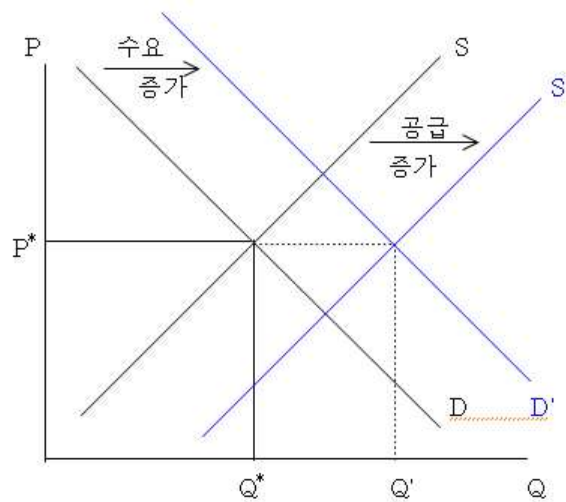
③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모두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다.

④ 이익 집단은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

당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7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④ A재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100개씩 증가하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를 가져오며, 그 변화폭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수요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은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8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 (다)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해당한다.

④ 기초 노령 연금 제도는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편적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필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개개인의 필요의 차이를 조사하여 그 차이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한다.
- ③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나, 공공 부자는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조약을 비준하는 것은 체결된 조약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확인하고, 그 조약으로부터 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최종적인 법률행위이다. 조약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권위원으로 체결할 수는 있지만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미 FTA는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통상적으로 발효 후 그 정해진 기간 중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3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내 법률의 경우 공포되고 2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으로 조약은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에 해당한다.

10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A는 가격이 10% 인상될 때 판매 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탄력적에 해당한다. B는 가격이 10% 인상되었는데도 판매수입에는 변화가 없으므로(증감률=0), 단위탄력적이다. 단위탄력적인 경우 가격 상승률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해도 판매수입은 항상 일정하다.

C는 가격이 10% 상승할 때, 판매수입도 10% 증가했다. 가격 상승률만큼 판매 수입이 증가하였으므로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다. C는 수요곡선이 수직으로 나타나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④ C재의 수요는 가격 상승률 = 판매수입 증가율이므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A재의 수요는 가격에 대하여 탄력적이다.
- ②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단위 탄력적)이다.
- ③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완전비탄력적으로 C에 해당한다.

11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A)는 의원내각제이며, (B)는 대통령제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사법권의 독립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하에서 모두 공통된다.
- ② 의원의 행정부 각료 경직이 인정되는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 ③ 내각의 의회 해산이 가능한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12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기업은 공식 조직, 2차 집단, 이익 사회,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 이익 사회, 친목단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② 자발적 결사체에는 친목단체,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이 있다. 따라서 ㉡에만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회사는 공식 조직, 회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③ 비공식조직은 공식 조직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문제를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 ④ 동호회는 기업과는 달리 정의적(情誼的) 관계를 중시한다.

13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사회구조를 사회 유기체적 관점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②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화를 향한 원동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은 갈등론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사회 변화를 항상 균형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③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상태, 즉 항상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④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사회병리론),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균형을 회복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한다.

14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사회 현상에 대한 계량화와 변수간의 일정한 관계(상관 관계) 발견, 법칙화는 사회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실증적 연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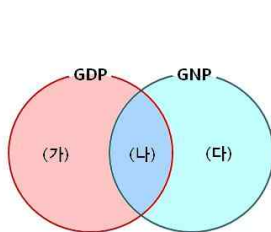
- ①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실증적 연구는 자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사회 문화 현상에도 적용가능하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③ 실증적 연구는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④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해석적 연구에 해당한다.

15번 정답 ④번

정답 해설 :



GDP와 GNP의 관계

- (가) : 외국인의 국내 생산(해외 지급 요소 소득)
- (나) : 자국민의 국내 생산
- (다) : 자국민의 해외 생산(해외 수취 요소 소득)
- (가) > (다) : GDP > GNP
- (가) < (다) : GDP < GNP
- GDP = GNP + 해외지급요소소득 - 해외수취요소소득

- ④ 외국 기업이 갑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해외 지급 요소 소득[(가)의 크기]에 해당하므로 2011년 GDP증가의 요인이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GDP와 GNP는 명목 가격으로 계산된 것으로 물가 수준과는 무관하다. 물가 수준(물가 상승)과 관련을 갖는 것은 실질 GDP와 명목 GDP이다.
② 2010년과 2011년의 GDP의 증가액은 10억달러로 동일하다. 하지만, GDP의 증가율은 2010년 10%($\frac{10}{100} \times 100\%$), 2011년 약 9%($\frac{10}{110} \times 100\%$)로, 2010년의 GDP증가율이 2011년의 GDP증가율보다 크다.
③ GNP의 총 금액만으로는 해외 수취 요소 소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16번 정답 ③번

정답 해설 : ③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오답 피하기]

-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재적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법률의 재정 및 개정은 정부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명 발의할 수 있다.

17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주어진 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배제성	
		있음	없음
경합성	있음	A재(사적 재화) 아이스크림, 옷 막히는 유료 도로	B재(공유 자원) 어족 자원, 혼잡한 시민 공원 막히는 무료 도로
	없음	C재(자연 독점) 전기, 케이블 TV 안 막히는 유료 도로	D재(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 안 막히는 무료 도로

② 공유자원은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항상 남용, 멸종, 훼손, 고갈되기가 쉽다.(공유지의 비극)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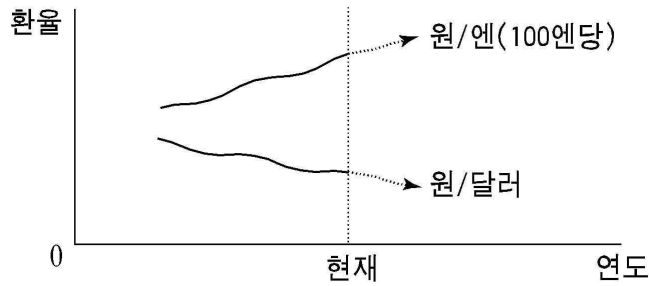
- ① 사적재화는 시장에서 거래 된다.
- ③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비배제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 ④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항상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공공재의 부족)

18번 정답 ③번

정답 해설 : 범죄 성립의 3요소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구성 요건 해당성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성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A와 B의 행위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A와 B의 행위는 모두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9번 정답 ②번

정답 해설 :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②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환율 인상 추세이므로 원화는 평가절하(원화 약세)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 기념 일본 여행은 빨리 다녀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황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원/엔 환율이 상승하면 엔화를 구입하기 위한 원화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③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대금은 늦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달러를 구입하기 위한 원화의 지불 액수는 감소할 것이다.
- ④ 달러에 대하여 원화가 환율 인하 추세이므로 원화는 평가 절상(원화 강세)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빨리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20번 정답 ①번

정답 해설 : 노동 가능 인구는 변동이 없다는 단서에 주의하고,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므로, 노동 가능 인구를 100명이라고 놓고 표를 수정하여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쉬운 접근 방법이 된다.

구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2010년	48명	32명	20명
2011년	42명	28명	30명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취업자} + \text{실업자}} \times 100, \quad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노동가능인구}} \times 100,$$

노동 가능 인구 = 경제 활동 인구 + 비경제 활동 인구,

$$\text{경제 활동 인구} = \text{취업자} + \text{실업자}$$

- ① 2010년의 실업률 = $40\% \left(\frac{32}{80} \times 100 \right)$, 2011년의 실업률 = $40\% \left(\frac{28}{70} \times 100 \right)$, 2010년과 2011년의 실업률은 40%로 동일하다.

[오답 피하기]

② 2010년의 고용률 = $48\%(\frac{48}{100} \times 100)$, 2011년의 고용률 = $42\%(\frac{42}{100} \times 100)$,

노동 가능인구는 동일한데 취업자의 수가 줄어들었으므로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③ 노동가능인구는 동일한데, 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다.

④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취업률을 보고 알 수 있다.